

다산포럼



Seon Geun-sik, Seoul National University

형평사 창립 100주년을 돌아보며

보름 후에 익산에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동인회가 창립되었다. 그 격문도 대단하다.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그 악마와 같은 각색 계급으로부터 무리한 학대를 받을 때...

형평사는 창립 당시에 사칙 제3조로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장려, 상호 친목"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한편으로는 동학과 천도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3·1운동과 민족 언론 운동의 맥을 잇는 신분 해방과 차별 철폐 운동이었다.

그러나 신분 해방을 내건 형평 운동이 순탄할 수는 없었다. 형평사 창립 직후부터 주변의 일반 농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생겨나 곳곳에서 충돌했다. 1925년에 예천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영향이나 수평사와의 연대가 모색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통제 정책으로 전환했다. 1927년 고려혁명당 사건으로 주요 지도자였던 장지필과 조귀용 등을 검거했지만 이들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이었다.

해방과 6·25전쟁,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신분 차별은 사라졌다. 형평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게 되는 높은 사회 이동율을 바탕으로 우리는 말 그대로 성공한 나라를 일구었다.

부모로부터 재산과 능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행복을 좌우한다. 그것이 옛날의 신분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이런 새로운 신분론이 고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니 아스라하지만 또렷하게 남아 있는 기억 한 조각. 시장에 갔다가 우리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옆 동네 주민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서로 존대어를 쓰기는 했지만, 약간 어색한 말투가 마음에 걸려 그와 헤어지고 난 뒤 할아버지께 방금 사용한 호칭과 존대어에 관하여 여쭙었더니, "옛날에는 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대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다.

청춘 특특



Choi So-won, Jeonnam National University

편의 위한 공유 키포드, 안전·에티켓은 뒷전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76건에 불과했던 공유 키포드 사고가 2021년 2842건까지 증가하였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전동 키포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모터사이클용 안전모 착용이 필수로 요구되고 1인 탑승이 필수다.

공유 키포드가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용과 반납이 간단한 공유 키포드의 특성상 사용 후 도로 아무 곳이나 키포드를 세워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잦으며, 건물의 출입구를 막거나 주차장을 막히니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량은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수단의 종류와 이용자 역시 다양하게 분화할 것이며,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거나 강화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나 역시도 등하곳길에 공유 키포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주위 대부분의 친구들도 공유 키포드 사용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공유 키포드 이용자의 팔 할 이상은 안전 장비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규제를 지키지 않고 키포드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시간도, 올바른 구역에 반납을 하는 시간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5년 전과 현재 도로의 광경은 사뭇 달라졌다. 폭이 넓은 인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즐비하게 늘어선 공유 키포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 공유 키포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 퍼스널 모빌리티 형식으로 도입된 것이 그 시발점이다.

기고

소나무, 포기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무언의 감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관 말 옛 시인의 허사라고 예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려~"

노산 이은상은 옛 추억과 함께했던 그 큰 소나무가 베어지고 없는 허무함과 절망으로 일제 강점기 국권을 잃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표현했다. 또 산시태가 나서 무너지고 난 곳에 어디선가 날아 와 다시 끈질긴 생명력으로 새싹을 틔우고 저러나 키를 재듯 경쟁하는 소나무를 통해 후대의 새로운 희망과 고난 극복의 의지를 담아 시를 지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여전히 소나무가 으뜸이고, 자신의 앞마당에 소나무 한 그루를 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소나무는 조선시대 임금님 행차에 길을 열어 주었다 하여 벼슬을 하사받은 속리산 정이품송, 재산을 보유한 석승령 등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의 의미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를 가진 신성한 나무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민족수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정서와 관련한 소나무의 산림문화적 이해가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소나무를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입사 초기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다. 신촌내기 공무원에게 선배들은 소나무 벌목할 때 주의 사항을 말해 주곤 했다.

적 이해가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소나무를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입사 초기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다. 신촌내기 공무원에게 선배들은 소나무 벌목할 때 주의 사항을 말해 주곤 했다.

이런 소나무가 수만을 당하고 있다. 불에 잘 타는 수종이라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는 오명을 쓰고 소나무 재선충 등 병충해에 약해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조선시대부터 대형 산불이 여러 번 발생한 기록이 있고 최근 들어 2000년과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한 우점한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의 소나무이다.

소나무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무단 이동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항상 푸르른 빛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소나무를 위하여!



Park Myeong-gil,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우리 나라의 문화를 나무와 관련지어 흔히 '소나무 문화'라고 한다. 예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선산에 소나무를 심었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솔가지를 금줄에 끼워 생명의 탄생을 알리고 동시 잡인의 출입을 금하였고 그 소나무에 오복을 빌었고 병들면 낫기를 빌었다. 또한 과거에 등과하면 그 소나무 밑동에 관대를 걸어 주고 축복했다.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등장하고 소나무를 주제로 한 시·음악·미술 등 창작 활동의 문화적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국보로 지정된 김정희의 '세한도' ()에 등장하는 소나무를 보면 검은 묵으로 그린 단순한 그림이지만 소나무의 의연하고 고독한 표현이 김정희의 마음을 이해

社說

1년 앞 총선...호남 민심은 변화를 원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결정되는 무대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거야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일제강점기 공방전에 돌입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단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4~6일 조사에선 내년 총선에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대립하며 극한 대치를 반복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 실종'이 일상화된 원인으로는 승자 독식과 양당 중심 적대 정치를 부추기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꼽히는 만큼 비례성과 대표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 정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진보 진영의 심장 역할을 해 온 호남 민심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특성상 호남의 경쟁 구도는 민주당의 강한 우세가 점쳐지지만 최근의 저조한 투표율로 볼 때 독점 구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진 정책을 펴 온 국민의힘은 선전을 자신하고 있고, 진보정당들도 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역 물갈이 폭도 관심사다. 16대 이후 역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과반을 넘는 경우가 많아 변화에 대한 민심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이 '묻지 마 지지'가 아니라 신중한 현안들을 풀어내고 호남 정치의 위상을 끌어올릴 역량 있는 중진을 키우고 신진을 발탁하는 전략적 선택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빛원전 '핵폐기장' 일방적 추진 철회해야

영광 한빛원전 내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핵폐기장) 신축이 확정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구 저장 시설이나 다름없는 막중한 사안인데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영광 한빛원전과 경북 울진 한울원전 부지 내부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잇따라 밝혔다. 건식 저장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로,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을 목표로 건립된다.

한수원의 발표에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한수원 측은 '한시적 활용을 위한

신축'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타 지역에 영구 시설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립하는 핵폐기장은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원전이 가동된 이후 40년 동안 중간·영구 저장시설 부지를 물색해 왔지만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독단적인 처사라는 비난을 받게 충분하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소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임시방편으로 원전 내부에 신축을 결정하고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자칫 원전이 있는 지역에 핵폐기장까지 떠넘기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발표에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한수원 측은 '한시적 활용을 위한

無等鼓

꽃샘추위가 무색하게 봄이 반박하고 있다.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 목련, 벚꽃이 차례로 저더러 그 아쉬움만큼 진달래와 철쭉이 반가운 꽃망울을 내밀고 있다. 연둣빛 풀 내음이 절로 묻어나는 봄나물도 계절의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일상의 곳곳에 봄이 찾아왔지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以春)의 상황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점차 가시고는 있지만 민생 경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침체에 수출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대적 공존에 기반 정치권의 끊임 없는 정쟁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호남의 현실도 답답하기 마찬가지다. 지방 소멸의 시대를 헤쳐 나갈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은 이제 실상이 됐다. 지역 역량의 결집 등을 이끌지 못하면서 군 공황 이전, 전남 지역 의대 유치 등 지역 현안은 좀처럼 접점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지역 경제를 이끌 미래 전략 산업도 뿌리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 텅 빈 농어촌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서진 정책'은 그야말로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가장 화사한 봄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낸 뒤 온다고 한다. 그 봄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를 것"이라며 절망적 현실을 온몸으로 견뎌 낸 사람들의 묵임 것이다. 이는 '차별과 소외'의 프레임 속에서 묵묵히 역사의 진전을 이끌어 온 호남의 모습과 겹친다. 결국 갈등과 혼돈의 시대에 '호남의 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